

서울 서남권 창업·R&D기반 구축 창동·상계 일대 문화시설 등 건립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추진
동남권에 국제업무·MICE 육성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등 조성
대학·상권 활용 균형발전 선도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균형발전계획은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생활SOC 확충 ▲지역간 교통 격차 해소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5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우고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한다.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 창업·R&D기반을 구축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교통거점

개발, 동남권은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 육성,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 등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대학, 상권 같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자족 기반이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상업 지역을 확대해 상권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생태계를 만든다.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도 조성한다.

동북권은 대학과 흥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 혁신산업 밸리를 구축하고, 서남권은 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 창업 밸리로 조성하며, 서북권은 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창업거점으로 만든다.

시는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생활SOC 확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과 공공도서관 조성을

지원한다. 공원이 부족한 서남권에는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울러 시는 대중교통 소의 지역에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부 교통허브 조성을 위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의 완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절차가 확정된 노선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철도와 GTX-B·C, 버스와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구축으로 환승 편의성을 높여 청량리역을 동북부 교통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다.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신축통합 기획 적용, 주거정비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상업·업무, 주거, 생활SOC 등 다양한 필요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대학교와 국방시설연구협회가 군 재난안전발전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대

경기대, 군 재난안전 발전연구 나선다

국방시설연구협회와 업무협약
“안전체계 구축 융복합 모델 되길”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과 국방시설연구협회 회장은 ‘군 재난안전발전연구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

비전통 군사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붕괴, 화재, 대형참사, 감염병 등의 재난과 테러 및 사이버 재난 등의 영역까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안전 기본법이 제정됐고, 정부에서는 재난 유형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매뉴얼·국민행동 요령 등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기업체나 정부 기관 장 등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 주둔시설이나 경계시설, 창고, 정비시설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산사태, 침수, 산불, 폭설, 붕괴 등에 대단히 취약하고, 야전부대에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예방활동에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보 유통과 대응체계 구축, 통합된 훈련 등

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국가재난이 발생시 긴급 구조기관의 일원으로서 수습과 대응, 대민 지원 등에 투입돼야 하나 정작 이에 대한 교범이나 매뉴얼은 미흡하다. 야전부대에서는 그동안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군 부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대학교 재난안전연구소와 (사)국방시설연구협회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동연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시설연구협회는 2007년도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방시설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뿐만 아니라 국방시설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방시설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은 “학교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 및 국방시설분야의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시설분야의 재난안전연구에 양기관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학·연간의 재난안전체계 구축 융복합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野·교육계, 고등특별회계법 지정철회 촉구

본회의에 법안 자동부의 ‘반발’
“예산안에 세입예산 반영 안돼
부수법안 지정 용납 할 수 없어”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필요
국민 위한 예산·세법 만들어내야”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덜어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고등교육 특별회계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야당과 초·중등 교육계는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5건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한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통과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사업 등 8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도 특별회계로 이관돼 총 11조원 상당이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이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 초·중등 교육계는 ‘윗돌 빼서 아랫돌 고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협의체의 막바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조율에서 교육세 3조를 초·중등과 대학·평생교육에 분배해 나누는 방식이 논의됐다. 더불어 교육교부금이 70조원 밑으로 내려갈 경우 재정 보전 방안도 협의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사실상 여·야·정의 협의는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야당과 초·중등 교육계는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 그것이 10만 국민의 목소리이며

유·초·중등 교육 주체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30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유감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예산 부수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초·중등 교육 재정을 변형해서 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기흥 교육위원장 등 야당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성명을 통해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이 어떻게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사이버대,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

9개 단과대학, 40개 학과 보유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23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했다.

서울사이버대는 2년 연속 최다 입학생이 등록한 사이버대학이며(2021~2022 대학알리미), 사이버대 최초로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 3회(2007, 2013, 2020)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12월 1일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학생 수요조사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신설한 모델연기전공과 새롭게 확대개편한 드론·로봇융합전공,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을 포함한 9개 단과대학(학부), 총 40개 학과(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대학 -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심리·상담대학 -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사회과학대학 -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안전관리학과 ▲융합경영대학 -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공과대학 - 컴

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디자인대학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웹문예창작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문화예술대학 - 문화예술경영학과,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미래융합인재학부 - AI·소프트웨어전공, 온라인커머스전공,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 통합건강관리전공, 회화·공예전공, 모델연기전공(신설) ▲국방융합학부 - 드론·로봇융합전공, 국방기술전공, 국방관리전공, 국제협력·북한전공 등이 있다.

신입학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 격만 충족하면 된다. 서울사이버대 입학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강인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서울사이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혁신 투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